

정책연구 과제제안서 1

정책연구과제명		수요자 관점의 과학기술 주요 정책 조사·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		
신청부서		연구개발정책과	담당공무원	이지은 사무관
연구방식		1. ☒ 위탁형 용역 2. ☐ 공동연구형 용역 3. ☐ 자문형 용역		
연구기간		'13.5 ~ '14.4 (12 개월)		
예산 규모	항목	1. ☒ 포괄 연구개발비 2. ☐ 사업별 연구개발비		
	예산금액	50백만원		
계약방법		공모(일반경쟁)		
연구의 필요성 (긴급한 사유)		○ 과학기술정책의 국민 소통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의 접근성 활성화 필요 - 과학기술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연구결과 및 관련 행사 결과를 조사·정리·분석하여 종합적 과학기술 정책자료 제공의 확대		
연구내용		○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주요 행사 조사 및 종합 분석 - 과학기술 관련 정책연구 결과(2012년도 약 50건)의 요지와 정책제언을 주요 과학기술 정책의제로 구분하여 종합 조사·분석 - 다양하게 개최되는 세미나, 포럼, 공청회, 심포지엄 등 과학기술 정책 관련 행사(2013년도 약 130건)의 주요내용과 행사에서 제안된 정책제언을 주요 과학기술 정책의제로 구분하여 종합 조사·분석 ○ 조사·분석 자료를 기초로 사안별 현 과학기술 정책과 비교분석 및 선행 연구와 통합·연계한 종합분석 - 분야별·사안별 현 과학기술정책과 비교·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- 선행 연구와 통합·연계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(의제) 도출 ○ 동 조사 분석결과의 종합적인 DB 개발 및 운영 등 - 분석 결과물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○ 정책 및 행사 추적 리포터(모니터)제 도입 및 종합자문 등을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추진		
연구결과 활용방안		○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용역사업 및 주요행사 결과를 종합·분석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국민이해도 제고		

정책연구 과제제안서2

정책연구과제명		국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		
신청부서		우주정책과	담당공무원	이병수
연구방식		1. [✓] 위탁형 용역 2. [] 공동연구형 용역 3. [] 자문형 용역		
연구기간		2013.5 ~ 2013.11 (8 개월)		
예산 규모	항목	1. [✓] 포괄 연구개발비 2. [] 사업별 연구개발비		
	예상금액	40백만 원		
계약방법		공모(일반경쟁)		
연구의 필요성 (긴급한 사유)		○ 현재 국가우주개발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부재 - 기존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으로 보통 5~10년이 걸리는 우주시스템 개발 계획을 담기에는 한계 -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○ 나로호 성공에 따른 우주개발의 새로운 전향점 마련 및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존 계획의 검토·보완 필요 * 국정과제 : (25)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		
연구내용		○ 우주개발 활동의 글로벌 미래 환경 분석 - 주요국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분석을 통한 우주개발 미래상 도출 - 미래 우주활동의 글로벌 과제 및 이슈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○ 기존 국가우주기술개발 계획의 현황 검토 및 연계 방향 설정 -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 계획의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점 도출 -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등의 반영 방안 검토 ○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설정(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) - 기존 국가계획, 비전(안), 신정부 국정과제 등을 총괄 반영 - 관계 정부부처 소요, 산·학·연 전문가 의견, 국민여론 등 반영 - 중점목표 및 추진전략을 단계별/주제별로 명확히 명시 ○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세부 프로그램 및 사업 도출 - 상위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분야별 우주임무 설정 - 소요기술(우주시스템) 개발 또는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 도출 - 프로그램 및 사업 단위의 상세 목표 및 전략, 계획(안) 도출 - 프로그램 별 투자 우선순위 결정 - 적절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·제도적 지원방안 도출 ○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의 총괄 예산(안) 및 로드맵 마련 - 사업별 예산(안) 도출 및 총괄 로드맵 마련 ○ 「국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(안)」 최종 마련		
연구결과 활용방안		○ 「국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」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활용		

정책연구 과제제안서3

정책연구과제명		국가안보 및 국민복지 수요창출을 위한 인공위성 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		
신 청 부 서		우주기술과	담당공무원	오남준
연 구 방 식		1. ☒ 위탁형 용역 2. ☐ 공동연구형 용역 3. ☐ 자문형 용역		
연 구 기 간		2013. 05 ~ 2013. 11 (7 개월)		
예산 규모	항 목	1. ☐ 포괄 연구개발비 2. ☒ 사업별 연구개발비		
	예산금액	40백만원		
계 약 방 법		공 모(일반경쟁)		
연구의 필요성 (긴급한 사유)		○ 현재 개발 중인 위성과 개발 계획 중인 위성만으로는 국가안보, 국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성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음 (16기 개발, 2기 발사대기, 4기 개발 중) - 다양한 위성활용 수요 및 성능을 고려한 전략적 위성개발을 위한 인공위성개발 정책 수립 필요(미래부 우주기술과 직제 고유업무) ○ 또한, 현재까지의 위성개발 성과를 발판으로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위성 개발전략이 필요한 시점		
연 구 내 용		○ 세계 주요국의 위성개발 방향 및 전략 분석 - 선진국들의 위성개발계획 및 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- 선진국들의 주요 미래 위성개발정책방향 및 전략 분석 ○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인공위성 수요 창출 - 제1,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상의 정부 위성개발정책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(각 인공위성별 목적·기술·활용 분석) - 정부부처별 인공위성 활용분야 공공 수요 및 민간 분야의 수요 분석을 통해 개발이 필요한 위성종류 및 성능 도출 ○ 국가 인공위성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- 국가 인공위성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단계별 추진정책 도출 · 위성개발을 위한 단계적 세부 목표, 전략, 인력, 소요예산 및 인프라 구축 지원계획 도출 · 위성별 수요예측을 통한 단계적 개발순위·성능 및 활용·spin-off전략 도출 · 위성개발, 인력양성 및 활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도출 - 국가 위성개발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제시 ※ '위성활용 수요 및 우주사업 활성화 등을 고려한 전략적 위성개발계획 수립'(KAIST, '11.7~'12.1)에서 도출된 계획의 구체화 모색		
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		○ 전략적 국가 인공위성 중장기 개발정책 추진에 활용		

정책연구 과제제안서4

정책연구과제명		창조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해외 과학기술혁신센터설립 방안 기획연구 추진		
신청부서		과학기술협력담당관 유럽-아시아협력팀	담당공무원	우명순
연구방식		1. [✓] 위탁형 용역 2. [] 공동연구형 용역 3. [] 자문형 용역		
연구기간		'13.05월 ~ '13.10월 (6개월)		
예산 규모	항목	1. [✓] 포괄 연구개발비 2. [] 사업별 연구개발비		
	예산금액	50백만원		
계약방법		공모(일반경쟁)		
연구의 필요성 (긴급한 사유)		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며, 해외 인적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☐ 각 부처와 출연(연)이 해외 분원·센터를 설치, 운영하고 있으나, 대부분 소규모(대부분 10명, 연간 5억 미만)이고 기관간 연계가 부족으로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 발생 * 교과부(러시아, 중국), 생기원(미국, 중국, 인도네시아, 베트남), ETRI(미국, 중국), KIST(독일, 인도) ☐ 해외 과학기술혁신 거점으로서 K-이노베이션 (KIC)를 설립을 통해 조직화되고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 추진 필요		
연구내용		☐ 개도국과 선진국 각각의 유형에 대해 특성에 맞는 'K-Innovation Center(KIC)'로 설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개편안 마련 <선진국형*> * KIC I: 기존 부처 및 출연(연)의 해외 분원·센터를 재편하여 선진국 전략국가 (미국, 중국, 독일 등) 위주로 설치('14년) ○ 정부, 출연(연) 산하 해외 분원·센터 운영 현황 파악 및 진단·분석 및 이를 토대로 전략지역 위주로 재편 방향 마련 - 현지 정보 수집, 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전주기 글로벌 창업 지원, 국내 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 ○ 센터 기능에 따른 적정 조직, 인력 규모 등 구성 및 운영 방안 <개도국형*> * KIC II: '13년부터 추진하는 「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」를 개편·확대하여 전환('13년 1개 센터) ○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개발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, 현지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○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연계·협력 방안		
연구결과 활용방안		☐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·확대해하여 추진해 나갈 「K-이노베이션 센터(KIC) 설립·운영사업」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및 향후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정책 마련 시 참고		

정책연구 과제제안서5

정책연구과제명		OECD 과학기술장관회담 유치를 위한 의제 발굴 정책연구		
신청부서		국제기구협력담당관	담당공무원	김수정 사무관
연구방식		1. [o] 위탁형 용역 2. [] 공동연구형 용역 3. [] 자문형 용역		
연구기간		2013.05 ~ 2013.12 (8 개월)		
예산 규모	항목	1. [o] 포괄 연구개발비 2. [] 사업별 연구개발비		
	예상금액	40백만원		
계약방법		공모(일반경쟁)		
연구의 필요성 (긴급한 사유)		○ 2015년 상반기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유치 개최를 위한 준비 활동 필요 -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2008년 이후 OECD 차원의 과기장관(혹은 고위급)회담은 개최되지 않았고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음 - 2015년 상반기는 박근혜 정부의 '창조경제' 추진의 중간점검적 성격 - OECD 과기장관회의의 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필요		
연구내용		○ OECD 과기장관회의의 다양한 잠정 주제를 '창조경제'와 관련하여 분석/검토 - OECD 과기장관회의는 OECD 회원국 및 확대관계국 (주요개도국)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함 - 또한,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의 중점 국정과제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음 - 이러한 기준으로 현재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과 '창조경제'를 연계하여 가능한 잠정주제들을 발굴 검토함 ○ OECD 과기장관회의의 관련 주제들과의 사전 합의 도출 - 분석된 주제(안)에 대해 한국 측, OECD 측, 재외공관 및 주요 회원국 등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협의하여 사전 합의 도출		
연구결과 활용방안		○ 본격적인 OECD 과기장관회담의 준비 자료 제공 - 2015년 상반기에 회담 유치를 목표로한다면, 2013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준비/협의를 시작하여야 함 - 본 정책과제의 결과물은 이러한 본격적인 준비 활동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- 또한 사전 협의/합의 과정을 통해 보다 매끄러운 준비 활동을 지원		

정책연구 과제제안서6

정책연구과제명		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방안 기획연구		
신청부서		창조경제담당관	담당공무원	박시정 사무관
연구방식		1. ☒ 위탁형 용역 2. ☐ 공동연구형 용역 3. ☐ 자문형 용역		
연구기간		'13.5 ~ '13.10 (6개월)		
예산 규모	항목	1. ☒ 포괄 연구개발비 2. ☐ 사업별 연구개발비		
	예산금액	60백만원		
계약방법		공모(일반경쟁)		
연구의 필요성 (긴급한 사유)		박근혜 정부 국정목표인 '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' 실현을 위해 범부처 공동의 '창조경제 실현계획' 수립 추진 필요		
연구내용		○ 창조경제실현계획 수립 기획 및 자문 -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 필요성, 수립 방향, 비전, 목표, 추진전략, 추진과제 등 기획 및 자문 - 창조경제 실현계획 대표 프로젝트 도출 ○ 창조경제 관련 해외사례 연구 및 국내현황 분석 ○ 과학기술 R&D 패러다임 혁신, 성장동력 창출, 벤처·중소기업 육성, 창의성 발현 및 보상체계 구축,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 창조경제 실현계획 주요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○ 창조경제 실현계획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기획 및 자문		
연구결과 활용방안		○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방안 도출에 반영		

정책연구 과제제안서7

정책연구과제명		창조산업 창출·성장촉진을 위한 법·제도 연구		
신청부서		창조경제기획담당관	담당공무원	양기성 사무관
연구방식		1. ☒ 위탁형 용역 2. ☐ 공동연구형 용역 3. ☐ 자문형 용역		
연구기간		2013. 5. ~ 2013. 12. (8개월)		
예산 규모	항목	1. ☒ 포괄 연구개발비 2. ☐ 사업별 연구개발비		
	예산금액	80백만원		
계약방법		공모(일반경쟁)		
연구의 필요성 (긴급한 사유)		○ ‘국민행복, 희망의 새 시대’의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국정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- 국정목표 1 :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- 추진전략① :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○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과 창의정신이 왕성히 살아날 수 있는 경제사회 체제 구축 필요 - 창조경제 관련 법·제도의 제·개정 및 관련 규제 개선		
연구내용		○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○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보상받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·제도 개선사항 및 정비방안 연구 ○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방향 제시		
연구결과 활용방안		○ ‘창조경제 특별법(가칭)’ 제정시 검토자료로 활용 ○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관련 법·제도 개선안 마련 ○ 경제주체가 동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		

정책연구 과제제안서8

정책연구과제명		연구개발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방안 연구		
신청부서		창조경제기반담당관	담당공무원	한소희 사무관
연구방식		1. ☒ 위탁형 용역 2. ☐ 공동연구형 용역 3. ☐ 자문형 용역		
연구기간		2013. 05 ~ 2013. 10 (6개월)		
예산 규모	항목	1. ☒ 포괄 연구개발비 2. ☐ 사업별 연구개발비		
	예산금액	50백만원		
계약방법		공모(일반경쟁)		
연구의 필요성 (긴급한 사유)		○ '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, 국민의 권익증진,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·활동의 촉진이 필요 ○ 특히, 연구개발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창조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육성방안의 마련이 시급		
연구내용		○ 연구개발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및 실태조사 - 국내 주요 분야별 설립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- 주요 선진국 사례 조사·분석 - 협동조합기본법이 ICT, 과학기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○ 연구개발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확대방안 연구 - 주요 사업분야 및 국가연구개발사업(연구기관)과의 연계방안 도출 -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- 사회서비스 개선 및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○ 연구개발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방안 연구 - 사업분야 개발 및 지원분야(금융, 교육, 기술)별 추진방안 연구 -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 연구		
연구결과 활용방안		○ 협동조합기본법 시행('12.12)에 따라 연구개발분야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촉진을 통한, 새로운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개선을 위해 - 현황·운영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- 주요 연구개발분야별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정책 수립 참고 - 정부지원 중단 후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향상 정책 수립 참고		